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1년 3월 25일 (목)

CONTENTS

-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브리프
(IB 2021-05)

CONTENTS

- I.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 1
- II.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 13
- III.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 22
-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종인, 이윤식

편집간사: 이시우

발 행 일: 2021년 3월 25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이번 호(3월 4째주)는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이인배·김태원 통일외교안보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1.20)을 통해 트럼프 前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에 나섰다 음에도 불구하고, 對中 견제정책은 오히려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일 2+2(3.16), 한·미 2+2(3.18), 그리고 쿼드(QUAD) 정상회담(3.19)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들간 연합체 구성을 적극화함.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중 견제 정책에 우리는 쿼드 체제의 방향성과 역할, 협력의 방식 등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국제사회에 투영시켜낼 필요가 있음

제2편: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한상필 비서관)

2019년 주요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는 497조원으로 자산대비 167.1%에 이룸. 주요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이후 개선추세였으나 문 정부 들어 다시 악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을 수정·폐기하고,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변경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를 압박했기 때문임. 더구나 한국판뉴딜사업은 추가적인 재무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에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재수립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적정투자 유도 △공공기관 평가체계 개선 등을 공공기관 재무상황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제3편: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나경태 연구위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사태의 영향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문제는 국내 OTT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외국 OTT기업들이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점임.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망사용료 및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미국의 대중 경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작성: 이인배·김태원 통일외교안보실(lee.in.bae@ydi.or.kr)

바이든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1.20)을 통해 트럼프 前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對中 경제정책은 오히려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특히, 미·일 2+2(3.16), 한·미 2+2(3.18), 그리고 쿼드(QUAD) 정상회담(3.19)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들간 연합체 구성을 적극화함. 이러한 바이든 신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중 경제정책에 우리는 쿼드 체제의 방향성과 역할, 협력의 방식 등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국제사회에 투영시켜낼 필요가 있을 것임

1. 바이든 신정부의 對中 경제 가시화

□ 미·일 2+2(외교·국방장관) 회담(3.16, 도쿄) : 對중국 견제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확인

○ 미·일은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2+2회담을 개최, 중국 팽창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메시지를 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日 외무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 미·일 및 한·미·일 3개국 이 계속 협력해 나갈 것도 확인했음”

- 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압력 수단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두고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이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임”

-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주춧돌(cornerstone)로 계속될 것임”
- 미·일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며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함
 - 특히, 동·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양 패권을 강화하고 군사·경제 등 각 분야에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
 - 아울러 미·일은 홍콩 및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유
-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3.18, 서울) : 한미 이견 속에, 미국의 중국 견제 필요성 강조
 - 블링컨 국무장관은 訪韓 준비 과정에서 확인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바이든 정부의 어젠다를 분명히 밝히는 방식을 선택, 블링컨 장관이 계속 중국을 언급하자 “회담의 무대는 한국이지만 청중은 중국”이란 말이 나옴
 - 反중국 연대체인 쿼드(Quad)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고 답한 반면,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비공식적인 동조국들의 모임이며,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미간 쿼드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밝힘
- 미·중 알래스카 회의(3.19, 알래스카) : 노골적 적대감을 표현한 상견례
 - 미국과 중국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틀간 세 차례 2+2회담을 진행
 - 북핵/북한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낮은 수준의 합의에

도 이르지 못한 채 종료

- 이로써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
-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대해 동맹과 공유하는 우려를 전하고, 홍콩, 신장, 티벳, 대만, 사이버 공간 등 미중 간 충돌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경고하며, 미중 갈등의 골을 그대로 보여준 회담
- 블링컨 국무장관은 “동맹과 공유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미국의 정책과 원칙, 세계관을 제시하고 싶었고, 이번 회담에서 이 일을 했다”고 회담 후 소감을 밝힘
- 양제츠 정치국원은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양측은 앞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궤도를 향해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기 위해 ‘무갈등’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
- 왕이 외교부장 또한 “중국은 주권이 원칙의 문제이며 이를 방어하려는 중국의 결단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언급

2. 反中 4자 연대(쿼드 QUAD) 체제 구축 진행

□ 쿼드(QUAD) 진행 상황

-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음
-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2018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공식적으로 명시, 美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와 국무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A Free and Open Indo-Pacific*)를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
 - ※ 2017년 11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FOIP: 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을 공식화하고,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2018.5.30.)
 -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확대강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반중 연대 노선 강화
 - 쿼드는 미국 주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서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중국 패권주의 견제를 위한 성격
- 쿼드 전략대화는 2017년 11월 4국 국장급 관료 회담으로 시작, 2019년 9월 개최된 회의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된 이후, 3월 12일 첫 정상회담 개최로 제도화 진전 중
 - 2019년 9월 유엔총회(UNGA) 계기로 미국(뉴욕)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 2차 회담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QUAD Plus) 구성을 한국, 아세안, 뉴질랜드 등에게 제안¹⁾

1) 2020년 10월 대면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12월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12.18,

- 당시 美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 방문을 패싱하고 일본을 들리서 쿼드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며 쿼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재조명
- 일본 외무성은 3차 회담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바이든 정권 주도하에 대중국 봉쇄 노선인 인도-태평양 구상과 쿼드가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강조

〈표 1-1〉 쿼드 전략대화 발자취

- ▶ 2017년 11월 4국 국장급 관료 회담으로 시작
- ▶ 2017. 12 『2018 국가안보전략』에서 인도태평양 구상 공식 언급
- ▶ 2018. 5. 30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
- ▶ 제1차 장관급 쿼드 전략대화 : 2019년 9월 미국(뉴욕)
 - UN총회 계기, 장관급 첫 회의
- ▶ 제2차 장관급 쿼드 전략대화 : 2020년 10월 일본(도쿄)
- ▶ 제3차 장관급 쿼드 전략대화 : 2021년 2월 화상회의 - 정례화 합의
- ▶ 제1차 쿼드 정상회담 : 2021년 3월 12일(화상회의)

□ 미국 전략서를 통해서 본 쿼드 구상²⁾

-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위협 요소인 중국에 대한 인식은 역대 행정부에 따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2015)는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 군사력 현대화와 군비 확장으로 발생하는 상호 오해로 인한 위협을 낮추기 위해 그들을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란 소극적 입장을 표명
 -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2017)에서는 “중국은 자신의 경

Videoconference)를 개최해 북한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홍콩,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전략적 상황 변화를 검토, 2021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2) 바이든 신행정부의 쿼드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룬 공식적인 안보전략문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모두에 밝힌 바처럼, 중국에 대한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

제군사력 영향력을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 대한 강제적 설득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현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과 간섭을 차단하며, 역내 중국의 군사적 재량권(a freer hand)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적대적 인식을 표시

- 美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2018) 제II장 ‘인도-태평양의 전략 환경 전망’에서 인도-태평양 내 위협 요소를 강도 순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구분하면서,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
 - ‘수정주의 강대국(Revisionist Power)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직설적 표현 사용
 - “중국은 미국이 구축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국제 체제의 가장 큰 수혜를 입어 번영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중국은 이를 악용하여 미국이 지역 내 구축해 놓은 규칙 기반의 질서(the rules based order)와 가치(values), 원칙(principles)을 망가뜨리고 있다.”
 - 미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 분야 위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군사력 현대화(Military Modernization)와 강압적 행동(Coercive Actions)’
 - “중국이 단기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지역 패권(regional hegemony) 추구, 궁극적으로 범지구적 우세(global preeminence)를 추구할 것”
 - “중국은 광범위한 군사력 현대화를 바탕으로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분야 위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전략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
 -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강압적인 행위를 지속한다.”
 - “중국은 다른 국가가 중국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강제적, 유화적인 경제적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
 -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역 상대국의 기술과 정보를 훔친다.”

- 美 국무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2018)전반에 걸쳐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 특히 중국의 위협 중심으로 설명함

〈표 1-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상 중국 관련 서술

| 구 분 | | 주 요 내 용 |
|-----|------------|--|
| 서론 | |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인해 자국의 주권과 번영, 평화를 위협받고 있음 권위주의적인 수정주의 강대국들은 다른 국가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들의 편협한 이익확장을 추구하고 있음 |
| 제Ⅳ장 | 역내 거버넌스 옹호 | 중국 내부의 인권, 소수민족, 종교, 민주화 문제 등 언급 |
| 제Ⅴ장 | 평화와 안전의 보장 | (해양영역 보호) 남중국해 영토분쟁 사례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이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며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것임 |
| 제Ⅴ장 | 초국가적 범죄 대응 | (사이버 영역 위협)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행위자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3. 쿼드 참여국의 입장과 군사적 대응능력

- 쿼드 국가들은 중국의 수정주의적 행동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위협이라는 인식 공유 및 지역패권으로의 부상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나, 방법론적으로는 다양한 입장

□ 일본

-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봉쇄하거나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
- 일본은 미국의 패권 지원을 통해 역내 영향력 증대, 공세적인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강조

- 일본³⁾은 인도-태평양에서 작전하는 미국의 군사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신속하며 상호운용성이 탁월한 전력 제공 파트너, 즉 역내 ‘핵심 조력자(key enabler)’임
 - 일본은 對中 견제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전방 기지를 미국에 제공
 - 전방 기지에 약 5만 4,000명 미군 주둔, 해군 7함대, 해병 3원정군, 3개의 공군 비행단 등 해양통제(sea control) 및 세력투사(power projection) 능력 구비
 - ※ 7함대의 로널드 레이건함은 미국이 유일하게 항구적으로 전방 배치한 원자력항공모함으로서 역내 해양우세 확보에 중심적 역할 담당
 - FOIP 관련 미일동맹의 가치는 일본의 강력한 해군력과 직결
 - 해상자위대에는 약 4만 5천 명 현역이 근무, 총 49척의 주요 수상전투함과 20척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 장기원해작전의 주력은 각 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4개의 ‘호위대군(護衛隊群)’임
 - 최신 헬기항공모함 4척 운용, 이즈모급 2척은 장차 F-35B 전투기를 탑재, 운용하기 위한 성능개량이 예정

□ 호주

- 호주는 미국의 관여를 통한 지역 안정 및 중국의 기존 지역질서 편입을 선호하는 입장임
-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국 미래가 달린 “기회의 공간”으로 중시
 - 호주는 『2013 국가안보전략서』(*A Strategy of Australia's National Interest*)에서 “인도-태평양” 용어 처음 사용, 『2017 외교백서』에서 중국을 호주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

3) 김재호·민정훈, “트럼프 행정부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적 목표, 방법, 수단”, 『평화학연구』, 제21권 1호 (2020), pp.69~70.

- 호주의 안보 취약성 보완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위협 견제를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안보협력 강화
- 호주의 해군력은 호주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된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작전에서 실력을 발휘, 이를 고려해 장거리 대양작전에 적합한 전력을 발전시켜 옴
- 호주는 다른 쿼드 국가들에 비해 해상 항공력이나 지상으로의 세력투사보다 수상전투함 및 잠수함 전력의 현대화에 집중해 온 경향을 보임
- 호주 해군의 주요 수상전투함은 구축함 2척, 호위함 11척, 초계/연안전투함 15척임
 - 2010년대 27,800톤급 캔버라(Canberra)급 헬기상륙함 2척 건조 등 원정 작전 능력도 구비중임
-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영역 보호를 위한 해군의 '작전 속도(operation tempo)'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위해 호주 해군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최대화
 - 잠수함 전력: 6척→12척 증강
 - 호바트(Hobart)급 신형 방공구축함: 3척 확보
 - 안작(Anzac)급 호위함 8척→헌터(Hunter)급 차세대 호위함 대체
- 호주는 우방국들과 인도-태평양 인테버(Indo-Pacific Endeavor) 해상 전단 구성 및 미국과 호주 간 「군사태세협정」(Force Posture Agreement) 체결을 통해 역내의 군사적 역량 증진에 있어 양자 및 3자 간 군사 협력의 기회 증대

□ 인도

- 인도는 쿼드에 동참하면서도 미국의 對中 견제와 봉쇄전략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해 왔으나, 2020년 중국과 국경에서

유혈 충돌 사태 이후 태도 변화

- 2019년 9월 첫 장관급회의에서 ‘공유하는 가치’, ‘해양 안보’, ‘주권 존중’ 강조를 통해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4국 공동성명 발표나 회전이 없었던 것은 참여국들이 ‘중국 견제’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각론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
- 인도는 FOIP 비전을 일정 부분 공유, 쿼드 일원으로서 협력 의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요 파트너이지만, 미군과 인도군의 상호운용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단기간에 군사 협력과 높은 수준의 연합작전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전망
 - 인도 해군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해군 강국과 역량을 견줄 수 있다며 자긍심 충만
 - 대표적으로 자체 건조한 아리한트(Arihant)급 전략핵잠수함(SSBN), 러시아의 키예프(Kiev)급 항공모함을 개장한 45,000톤급 비크라마디티야(Vikramaditya) 보유
 - 호위함급 이상의 주요 수상전투함은 총 27척 운용, 중소형의 초계 및 연안전투함 100여 척 이상이며 해상항공력도 미국제 최신형 해상초계기 P-8I 넵툰(Neptune) 8기와 러시아제 전투기 미그-29K 45대 등임
 - 인도는 미국과 2018년 「통신 호환성 및 보안 협정」(Communication Comparability and Security Arrangement)을 체결, 상호운용성의 결핍을 극복하고자 연합군사훈련을 확대중임
 - 그러나 인도의 재래식 군사력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예산, 부적절한 정비 및 군수지원 등 역량 발휘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
 - 다양한 국가에서 개발된 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향을 지니는데, 현재 인도 해군이 운용하는 총 16척 잠수함 중 10척은 러시아제, 4척은 독일제, 1척은 프랑스제, 나머지 1척은 국산임

□ 쿼드 안보분야 협력 동향

○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말라바르(Malabar)' 해상 훈련

※ 말라바르(Malabar)는 1992년부터 인도와 미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번갈아 가며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합동훈련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해 정기적으로 실시

- 미국과 인도가 참여하는 말라바르 해상 훈련은 2020년 처음 호주 초청, 쿼드 4개국 모두 연합훈련에 참여했는데 10월 외교장관회담 직후 성사됐다는 점에서 동 훈련이 쿼드의 해양 안보협력을 위한 아키텍처로 발전할지 그 향방에 주목

※ 호주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2020 국방 전략 및 구조 계획(2020 Defense Strategic Update and 2020 Force Structure Plan)' 발표

4.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확대될 가능성

○ 미국방부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June 1, 2019))는 역내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지키는데 일종의 파트너십 국가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 대만을 지목

- 2020년 [對중국 전략보고서]는 EU, 아세안, 일본, 인도, 한국, 대만을 언급

○ 美 의회는 「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안보공약 의지를 강조하고, 미군은 중국의 군사적 공세 강화에 대응해 지난해 말 12차례의 대만해협 통과 작전 시행으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의지 과시

※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타이완의 고립 심화를 우려해 「대만법」(TAIPEI Act, 2020.3 발효)을 제정해 미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

□ 쿼트 플러스를 활용한 외교안보 전략 추진 필요

- 쿼트 플러스 참가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음
 - 중국의 반발은 예상되나, 쿼트 플러스 참가는 한중관계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국익을 관철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
- 역내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 초기에 개입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음.
 - 아직 태동단계이며, 정확한 전략적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제도화 前 단계에서 참가해, 우리의 외교안보 보다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국익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중국의 패권적 압력에 개별적 대응보다 집합적 대응이 안전
 - 역내 안보 질서뿐 아니라 국제안보 질서의 도전국으로서 중국의 공격적 행태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역부족일 수 있으나, 집합적으로 대응할 경우 효과와 안전성 차원에서 우월할 수 있음

Ⅱ.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작성: 한상필 비서관(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실)

2019년 주요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는 497조원으로 자산대비 167.1%에 이릅니다. 주요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이후 개선추세였으나 문 정부 들어 악화되는 모습.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을 수정·폐기하고,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변경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를 압박했기 때문. 더구나 한국판뉴딜사업은 추가적인 재무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재수립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적정투자 유도 △공공기관 평가체계 개선 등을 공공기관 재무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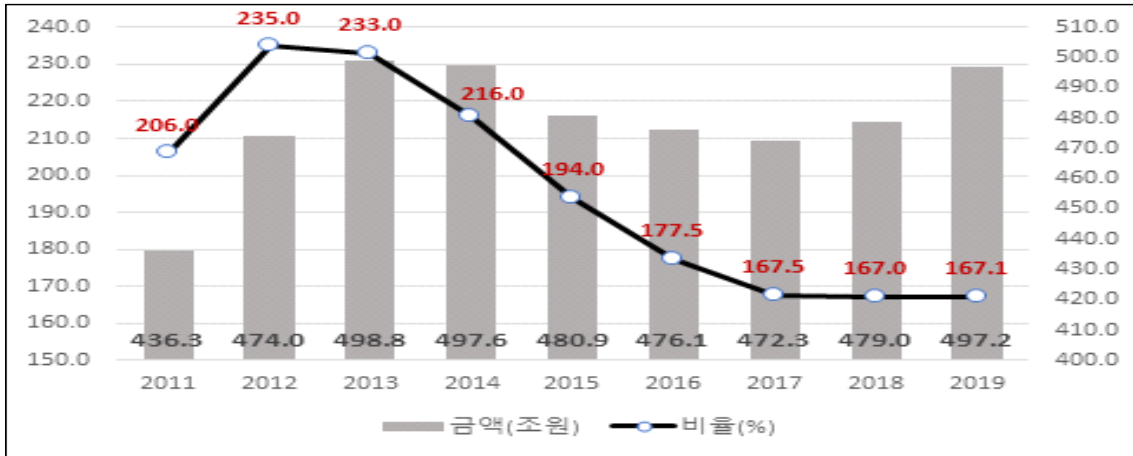
1.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 및 전망

□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9년도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는 497조2천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67.1%
 - 전년대비 부채규모는 18조2천억원, 부채비율은 0.3%p 증가
 - 337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156.3%에 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10.8%p 더 높은 상황
- 2013년 이후 변동추이를 보면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은 매년 감소해 왔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증가로 전환

-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2019년 부터 증가세로 전환

〈그림 II-1〉 주요 공공기관 부채 금액 및 비율 추이



출처 :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향후 공공기관 재무상황 악화 예상

- 기재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년 521조6천억원에서 '24년 615조 8천억원으로 94조2천억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자본은 '20년 302조9천억원에서 '24년 359조3천억원으로 56조4천억원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2년 173.0%까지 올라 '19년 대비 5.9%p 상승 하며 이후 '24년에 171.4%까지 소폭 하락할 전망

〈표 II-1〉 주요 공공기관 중장기 부채 전망

| 구분 | '19년(실적) | '20년(A) | '21년 | '22년 | '23년 | '24년(B) | 증감(B-A) |
|----------|----------|---------|-------|-------|-------|---------|---------|
| 부채비율(%) | 167.1 | 172.2 | 169.2 | 173.0 | 172.2 | 171.4 | △0.8 |
| 부채규모(조원) | 497.2 | 521.6 | 540.8 | 571.0 | 591.1 | 615.8 | 94.2 |
| 자본(조원) | 297.5 | 302.9 | 319.6 | 330.0 | 343.2 | 359.3 | 56.4 |

출처 :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참고〉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현황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정부는 매년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전체 337개 공공기관 중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됐는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관이 37개, 정부에 손실보전 책임이 있는 기관이 2개 포함됐음.

| 요건 | 개수 | 공공 기관 |
|-----------|-------|--|
| 자산 2조원 이상 | 총 37개 | 공기업 : 22개 LH, 한전, 도로, 한수원, 가스, 수자원, 철도, 석유, 인천공항, 발전5사, 주택보증, 지역난방, 부산항만, 한국공항, 강원랜드, 광물, 인천항만, 마사회 준정부기관 : 15개 건보, 예보, 사학연금, 철도시설, 공무원, 중진공, 주금공, 장학, 농어촌, 신보, 국민체육, 무보, 캠프, 기보, 산단공 |
| 정부 손실보전 | 총 2개 | 석탄공사(공기업), 코트라(준정부기관) |

출처 :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 부채 악화의 주요 원인

□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의 수정·폐기로 체계적인 관리 실패

-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재무상황을 건전화하도록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모두 폐기
- 기획재정부는 2017년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수정안’을 의결했음.
- 수정안에는 39조2천억원에 달했던 2017년도 부채감축 목표액을 31조3천억원으로 낮추고, 목표 차액 7조9천억원을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투입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 나아가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국정과제 관련 사업에 연평균 63조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함께 만들어졌음.
- 2016년도 공공기관 투자액이 54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조원 이상 많은 규모로 증가폭이 16.7%에 달했음(국민일보 '17.9.13 1·8면).

○ 결국 2017년은 공공기관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전면에서 나서도록 한 전환점이 된 셈

□ 정부지원 없이 공공기관 투자 확대만 지속 독려

○ 기획재정부는 2019년 9월부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들의 투자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확대를 독려하고 있음.

- 이후 '19년에 2차례, '20년에 9차례를 개최했으며 올해도 2월까지 두 차례 점검회의를 열었음

〈표 II-2〉 2017-2020년 공공기관 투자실적 및 재원 현황

단위: 억원, %

| 연도 | 투자 | | | 재원 | | | |
|------|-----------|-----------|------|---------|------|-----------|------|
| | 계획 | 실적 | 이행률 | 정부예산 | 비중 | 자체재원 | 비중 |
| 2017 | 628,960 | 494,062 | 78.6 | 103,428 | 20.9 | 390,634 | 79.1 |
| 2018 | 558,618 | 468,077 | 83.8 | 107,333 | 22.9 | 360,744 | 77.1 |
| 2019 | 566,819 | 546,426 | 96.4 | 135,860 | 24.9 | 410,566 | 75.1 |
| 2020 | 614,635 | 609,857 | 99.2 | 145,521 | 23.9 | 464,336 | 76.1 |
| | 2,369,032 | 2,118,422 | 89.4 | 492,142 | 23.2 | 1,626,280 | 76.8 |

출처 :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 문정부 출범 이후 주요 공공기관(27개)의 투자실적을 보면 사실상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

- 27개 주요 공공기관은 문정부 4년간 총 211조8천억원을 투자해 계획(236조9천억원) 대비 89.4%의 이행률을 보임

-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이행률은 78.6%에 그쳤으나 '18년 83.8%, '19년 96.4%, 지난해는 99.2% 수준까지 상승
- 투자된 재원을 보면 4년간 총 투자액의 23.2%, 49조2천억원 가량만 정부 예산이었으며 76.8%인 162조6천억원이 공공기관들의 자체재원으로 충당

□ 문 정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서 재무요소 축소

-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서 재무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제외하고 투자실적 등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포함한 것이 공공기관들의 무리한 투자와 재무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4년간 계획된 1조5천억원대 투자를 모두 이행했는데 부채비율이 255%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재원은 전액 자체재원으로 충당
 - 한국수자원공사도 8조6천억원 수준의 투자계획 중 8조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정부지원은 1조2천억원(15.4%)에 그쳤음.
- 문제는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 기관까지 무리한 투자에 동원된 점
 -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4년 동안 24조5천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대한석탄공사'의 투자액도 1,128억원에 달했음.
 - '한국석유공사'는 2017년 이후 4조2천억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718.5%에서 3020.9%로 대폭 증가

〈표 11-3〉 2017-2020년 공공기관 별 투자실적 및 재원 현황

단위: 억원, %

| 기관명 | 투자 | | | 투자재원 | | | | 부채 비율 |
|----------|-----------|-----------|-------|---------|-------|-----------|-------|--------|
| | 계획 | 실적 | 이행률 | 정부예산 | 비중 | 자체재원 | 비중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14,999 | 15,054 | 100.4 | 0 | 0.0 | 15,054 | 100.0 | 285.3 |
| 한국토지주택공사 | 746,462 | 730,053 | 97.8 | 185,894 | 25.5 | 544,159 | 74.5 | 254.2 |
| 한국수자원공사 | 86,720 | 79,926 | 92.2 | 12,270 | 15.4 | 67,656 | 84.6 | 167.0 |
| 한국도로공사 | 170,721 | 155,996 | 91.4 | 56,749 | 36.4 | 99,247 | 63.6 | 81.1 |
| 한국산업단지공단 | 25,817 | 23,542 | 91.2 | 15,635 | 66.4 | 7,907 | 33.6 | 83.9 |
| 부산항만공사 | 11,819 | 10,776 | 91.2 | 7,750 | 71.9 | 3,026 | 28.1 | 56.0 |
| 한국남부발전 | 37,272 | 33,786 | 90.6 | 0 | 0.0 | 33,786 | 100.0 | 154.5 |
| 한국전력공사 | 315,726 | 283,949 | 89.9 | 0 | 0.0 | 283,949 | 100.0 | 113.4 |
| 한국자산관리공사 | 64,312 | 57,606 | 89.6 | 900 | 1.6 | 56,706 | 98.4 | 158.4 |
| 인천국제공항공사 | 30,945 | 27,669 | 89.4 | 0 | 0.0 | 27,669 | 100.0 | 31.1 |
| 한국철도공사 | 29,053 | 25,640 | 88.3 | 3,946 | 15.4 | 21,694 | 84.6 | 257.9 |
| 한국중부발전 | 67,951 | 59,490 | 87.5 | 0 | 0.0 | 59,490 | 100.0 | 241.2 |
| 한국공항공사 | 17,256 | 14,487 | 84.0 | 345 | 2.4 | 14,142 | 97.6 | 9.4 |
| 한국수력원자력 | 182,012 | 152,794 | 83.9 | 0 | 0.0 | 152,794 | 100.0 | 132.8 |
| 대한석탄공사 | 1,349 | 1,128 | 83.6 | 11 | 1.0 | 1,117 | 99.0 | 자본잠식 |
| 국가철도공단 | 296,426 | 245,495 | 82.8 | 205,437 | 83.7 | 40,058 | 16.3 | 자본잠식 |
| 한국서부발전 | 36,695 | 29,602 | 80.7 | 0 | 0.0 | 29,602 | 100.0 | 173.1 |
| 인천항만공사 | 7,254 | 5,726 | 78.9 | 52 | 0.9 | 5,674 | 99.1 | 53.3 |
| 국민체육진흥공단 | 1,072 | 846 | 78.9 | 846 | 100.0 | 0 | 0.0 | 32.8 |
| 한국가스공사 | 59,144 | 46,345 | 78.4 | 0 | 0.0 | 46,345 | 100.0 | 382.6 |
| 한국농어촌공사 | 8,408 | 6,475 | 77.0 | 203 | 3.1 | 6,272 | 96.9 | 28.7 |
| 한국남동발전 | 45,221 | 33,871 | 74.9 | 0 | 0.0 | 33,871 | 100.0 | 115.7 |
| 한국동서발전 | 37,924 | 28,050 | 74.0 | 28 | 0.1 | 28,022 | 99.9 | 106.8 |
| 한국석유공사 | 60,126 | 41,964 | 69.8 | 2,076 | 4.9 | 39,888 | 95.1 | 3020.9 |
| 공무원연금공단 | 2,235 | 1,381 | 61.8 | 0 | 0.0 | 1,381 | 100.0 | 56.7 |
| 한국마사회 | 5,503 | 3,144 | 57.1 | 0 | 0.0 | 3,144 | 100.0 | 0.0 |
| (주)강원랜드 | 6,610 | 3,627 | 54.9 | 0 | 0.0 | 3,627 | 100.0 | 19.4 |
| | 2,369,032 | 2,118,422 | 89.4 | 492,142 | 23.2 | 1,626,280 | 76.8 | |

출처 :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공공기관 투자 부담 더욱 증가 전망

○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함.

- 이를 위해 현 정부는 한국판뉴딜의 추진에 공공기관들이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와 137+ α 개의 ‘자율확산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중점관리 프로젝트 2.7조원, 자율확산 프로젝트 1.3조원 투입 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중점관리 프로젝트인 ‘세종국가 시범도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조1352억원을 투자할 계획
- 한국석유공사는 자율프로젝트로 ‘부유식 해양풍력발전’ 등에 1조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의 사업에 1조1천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

○ 결국 한국판 뉴딜사업의 책임을 공공기관들이 떠안으면서 투자 부담증가, 재정상황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

〈표 II-4〉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별 성과창출 세부 추진계획

단위: 억원

| 기관명 | 사업내용 | 예산액 | 비고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W2H사업, 집단에너지-빌딩 그리드화사업 | 2,060 | 중점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세종국가시범도시, 드론활용 스마트건설현장관리 | 11,352 | 중점 |
| 한국수자원공사 | 국가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구축 등 | 2,356 | 중점 |
| 한국도로공사 | 수소충전소 확충 | - | 중점 |
| 한국산업단지공단 |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 - | 중점 |
| 부산항만공사 | 민관공 협업기반 창업공간 및 성장지원 | 150 | 중점 |
| 한국남부발전 | 에너지 기술마켓 구축 등 | 1,700 | 중점 |
| 한국전력공사 |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등 | 634 | 중점 |
| 한국자산관리공사 | 그린건축 투자확대 등 | 4,700 | 중점 |
| 인천국제공항공사 | 에너지환경인프라 분야 그린뉴딜 투자 등 | 5,425 | 중점 |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형 데이터 댐 구축 등 | 2,643 | 중점 |
| 한국중부발전 |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등 | 17 | 중점 |
| 한국공항공사 | 미래형 교통 충전허부 등 | - | 중점 |
| 한국수력원자력 | 빅데이터 기반 원전 정비 최적화 기반기술 개발 등 | 75 | 중점 |
| 대한석탄공사 | 풍력에너지개발 등 | 540 | 자율 |
| 국가철도공단 | 빅데이터 기반 철도시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1,903 | 중점 |
| 한국서부발전 | High-Five 열공급 연계형 연료전지 사업개발 등 | 5,813 | 중점 |
|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 400 | 자율 |
|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 - | 중점 |
| 한국가스공사 | SI기반 최적 설비운전시스템 구축 등 | 230 | 중점 |
| 한국농어촌공사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 11,380 | 자율 |
| 한국남동발전 | 공공데이터 활용 태양광 설비 관리 솔루션 개발 등 | - | 중점 |
| 한국동서발전 |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등 | 9,100 | 중점 |
| 한국석유공사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등 | 14,163 | 자율 |
| 공무원연금공단 | 빅데이터 기반 종합 민원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 | 자율 |
| 한국마사회 | 디지털비대면 전환을 통한 전산업 스마트화 등 | - | 자율 |
| (주)강원랜드 | 청년창업기업 폐광지역 이전지원 등 | 215 | 자율 |

출처 : 각 공공기관

3.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방안

□ 사실상 중단·폐기 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재수립 필요

- 현 정부 들어 국가·기업·가계 등 우리나라 경제주체가 지고 있는 빚이 급증해 5천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음.
 - 기업과 가계 부채의 증가도 문제이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경우 경영부실화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특히 공공기관부채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감축계획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었던 것이 현 정부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폐기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등을 다시 수립해서 부채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성과가 불확실한 투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정투자 유도

- 2017년 50조원 수준의 공공기관 투자는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서며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사업 추진에 동원된 공공기관들의 투자가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을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임
- 코로나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선도투자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투자 필요성을 기반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한석탄공사와 같이 자본잠식상태인 기관의 경우 정상화 이전까지 투자

확대를 제한하고,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단기간 부채상황이 급격하게 악화 된 경우에도 투자 확대를 자제토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한국판뉴딜사업과 같이 사업의 목표나 성과가 불확실한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내·외부 심사가 필요

□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관리와 사회적 가치 이행 등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

○ 2018년 공공기관 평가 기준 변경 이후 사회통합, 상생협력, 노사관계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

- 부채와 부채비율이 크게 악화된 기관도 경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성과를 높이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의 재무관리에 더욱 철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임.

Ⅲ.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작성: 나경태 연구위원 (na.kaeng.tae@ydi.or.kr)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사태의 영향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문제는 국내 OTT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외국 OTT기업들이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점.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망사용료 및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

1. 국내·외 OTT⁴⁾ 산업 현황

□ 글로벌 OTT산업, 매년 급속한 성장세

○ OTT 대표주자 Netflix(넷플릭스)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 시현

- 2020년 유료 구독자 수⁵⁾가 총 2억명 넘어섰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2,549만명, 유럽·중동·아프리카는 6,670만명을 기록함
- 2020년 매출은 250억 달러, 영업이익은 46억 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전년 대비 24%, 76% 증가

4)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기존 지상 전파가 아닌 인터넷 연결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말함. 현재 OTT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는 상태이며 방송법에 넣을 것인지, 통신법에 넣을 것인지,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음. 현재 OTT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5) 머니S, “넷플릭스, 세계 유료 가입자 2억 돌파… 2020년 영업이익 76%↑” 2021.1.20.

- 2020년 콘텐츠 제작 예산만 아마존의 두 배가 넘는 173억 달러(약 19조원)에 이르고 올해는 190억 달러(약 21조원) 투입이 예상됨
- Netflix 이외에도 아마존 비디오, 텐센트 비디오, 디즈니가 새롭게 OTT 시장으로 진입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아마존 프라임비디오와 아마존닷컴이 개발·운영하는 비디오 인터넷 서비스는 전 세계 구독자 1억5,000만명을 보유하고 있음

□ 외국 OTT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국내 OTT 유통 시장

- Netflix의 2020년 국내 결제금액은 5,173억원으로 전년 2,483억원 대비 108% 증가. 2020년 12월 결제 금액은 587억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금액임
-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유료 결제자 수는 총 410만명 추정⁶⁾
- 국내 OTT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많이 늘긴 하였지만, Netflix에 비해 1/3 수준임

〈표 III-1〉 2020년 국내 OTT 서비스 업체와 구독자 수

| | 구독자 수 | OTT 사업자 |
|----------|--------|--------------|
| 웨이브 | 296만 명 | SK텔레콤 |
| 티빙 | 237만 명 | CJ ENM, JTBC |
| U+모바일tv' | 226만 명 | LG유플러스 |
| '왓차 | 164만 명 | 국내 벤처 |
| 시즌 | 146만 명 | KT |

6) 애플리케이션·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2020년 12월)

- 국내 OTT시장은 점유율⁷⁾ 을 보면 거의 외국계 기업이 장악
 - 유튜브 62.3%, Netflix 16.3%, 페이스북 8.6%, 네이버 TV 4.8%, 웨이브 3.2%, 티빙 3.0%, 아프리카 TV 2.6%
- 국내 OTT 기업, 자체 제작 히트콘텐츠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
 - Netflix 성공비결은 자체 콘텐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 Netflix는 자본을 투자해 배우와 작가 감독을 섭외하고 있으며, 한 차원 높은 CG(컴퓨터그래픽), 글로벌 마케팅까지 활용
 - 하지만 이제 첫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OTT는 사실상 Netflix와 경쟁이 되지 않음⁸⁾

2. 국내 OTT 산업 관련 주요 쟁점

- 망사용료에서 국내 기업에 역차별 발생
 - 외국 OTT 사업자는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 OTT 사업자만 망사용료를 지불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음
 - Google(구글)의 하루 트래픽량은 국내 전체의 25.9%로 카카오(1.4%)의 18.5배, 네이버(1.8%)의 14.4배지만 통신업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음
 -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총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⁹⁾

7)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8) 오피니언 뉴스, “치열해진 ‘오리지널’ 제작 경쟁... '넷플릭스' 넘어설 수 있을까”

9) 과학기술통신부 2020년 4분기

○ 외국 OTT 사업자(유튜브, Google, Netflix)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트래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캐시서버¹⁰⁾구축 비용을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어 동등하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론

- 국내로 들어오는 망 구축비용은 본인들이 지불했으며, 반대로 미국, 유럽에서 국내 OTT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음

○ 매년 Google, Netflix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망사용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지만, 본사의 방침을 따른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망사용료 문제가 지속해서 유아무야되고 있음

□ 외국 OTT 서비스의 법적 규제 강화 방안 제기

○ Netflix가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OTT 상영 콘텐츠 비율 중 국내 콘텐츠를 유럽처럼 30%로 하자는 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5일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개최

• OTT 저작권·저작권접권 관련 이슈와 함께 특히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이 논의되고 있음

- OTT 콘텐츠쿼터제에 대해 정부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됨

○ 이에 대해 방송과 기존 미디어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도 OTT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선불리 규제하면 국내 OTT 서비스의 경쟁력까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¹¹⁾ 는 지적이 나옴

10) 캐시서버(cache server):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로,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웹서버를 가동시킬 경우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

11) 입법조사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최진응)

□ 국내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 2020년 7월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OTT에 사용되는 음원과 관련해 저작권료 2.5% 지불을 요구하였음
 - 음저협이 국내 OTT에 외국 Netflix가 지급하고 있는 2.5% 요율의 저작권료를 요구하자 국내 OTT 사업자 측은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56% 수준을 주장하고 있음
 - 그동안 별도 징수규정이 없어 국내 OTT사업자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원을 사용해 왔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12일 음저협이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함
 - OTT에 적용될 '영상물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권 요율을 올해 1.5%부터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영상물 전송서비스 저작권료 해외 사례¹²⁾: ▲독일(GEMA) 3.125%, ▲프랑스(SACEM) 3.75%, ▲일본(JASRAC) 명목 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SOCAN) 1.9% 등
- 현재 국내 OTT 사업자는 △Netflix와 국내 영상물 간 다른 저작권 체계 △이중징수 문제 △절차적 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하였음

1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년 12월 12일)

3.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OTT 산업발전을 위한 ‘선(先)성장, 후(後)규제’ 원칙 정립 필요

- 선부른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먼저 마련해야 함
- 음원 저작권료 문제도 법적 규제보다는 음저협과 OTT 기업 간 자율적으로 매듭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중재노력이 적절

□ 국내 IT(OT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 시급

- 역차별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Google은 지속해서 망 무료사용, 세금 미납부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앱 수수료 과다 부과, 뉴스 공짜 사용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대한 규제책으로 인앱결제¹³⁾강화 금지, 국내 법인에 대리인 지정¹⁴⁾, 법인세 6천억원 추징¹⁵⁾등이 추진
 - 하지만 Google은 국제 분쟁 및 소송으로 맞서고 있음
- 하지만 Google은 뉴스 콘텐츠는 아무런 과정 없이 무료로 사용하는 등¹⁶⁾ 역차별 문제가 여전한데 관리 주체인 정부는 10년째 방치
 - Google은 아직도 신문법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미등록 상태일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미지정

13) 구글은 올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In-App payment)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괄 30%로 인상한다고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구글이 거둬 들일 비게임분야 수수료가 무려 885~1.5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1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8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강제하고 있음

15)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2020년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추징 세액을 납부하는 동시에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16) “공짜뉴스 재미 본 구글, 세계 곳곳서 제동...한국은 아무 규제 안해” 조선일보, 2021.3.10

- 주요 선진국들의 대처방안 등을 참조하여 망사용료, 과세, 뉴스 사용료 등과 관련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
-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3월 12일, 10일 발의된 '2021 언론경쟁 유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 이 법안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기사를 작성하는 미국 내 모든 신문·방송·인터넷매체가 연합해 Google, 페이스북 등 뉴스로 이익을 남겨온 플랫폼 기업과 협상에 나설 수 있음
- 주요국들은 뉴스를 공짜 사용하는 Google에 대해 다음 대책을 시행
 - EU, Google의 뉴스 공짜사용에 대해 링크세(Link Tax) 부과
 - 호주, 미디어 기업 세븐웨스트미디어에 뉴스 콘텐츠 이용료 지불 합의
 - 프랑스, 뉴스정보제공자연합(APIG)에 뉴스 콘텐츠 이용료 지불 합의

□ 국내 OTT 산업 육성을 위한 'OTT콘텐츠쿼터제¹⁷⁾' 도입

-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우선은 OTT 산업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때까지 소위 'OTT콘텐츠쿼터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유럽에서 OTT쿼터제¹⁸⁾를 도입하였고 국내 영화 분야에서도 쿼터제가 주요한 성공요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

17) 국내 영화 보호를 위해 국내 영화를 정한 비율 만큼 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 쿼터제와 유사. 국내도 1966년 스크린 쿼터제 법제화 후 현재 연간 국내 영화 상영일 수를 73일로 규정

18) 유럽연합(EU)은 2018년 말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등 미국 OTT 플랫폼에 맞서 EU시청각서비스지침서를 개정. 해외 OTT 사업자에게 유럽 저작물을 의무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음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이유로 자국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을 30%로 규정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순, 2019~現在)

이슈브리프 2021-04 (발간일: 2021.3.11)

- ▶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 ▶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정책효과

이슈브리프 2021-03 (발간일: 2021.2.25)

- ▶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와 우리의 에너지전환정책 ▶ 한미동맹 현안문제 반성과 '동맹 최적화 전략' 모색
- ▶ 서울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도시생태재생 ▶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자원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브리프 2021-02 (발간일: 2021.2.4)

- ▶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 ▶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이슈브리프 2021-01 (발간일: 2021.1.14)

-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 ▶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20-16 (발간일: 2020.12.24)

- ▶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이슈브리프 2020-15 (발간일: 2020.12.10)

- ▶ 서울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 ▶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

이슈브리프 2020-14 (발간일: 2020.11.28)

- ▶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이슈브리프 2020-13 (발간일: 2020.11.12)

- ▶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 ▶ 임대차2법發 전월세대란: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이슈브리프 2020-12 (발간일: 2020.10.29)

- ▶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11 (발간일: 2020.10.15)

-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 부동산 과세 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이슈브리프 2020-10 (발간일: 2020.9.28)

- ▶ 전월세전환율 2.5% 강제 인하의 타당성 검토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유통정책 제언
- ▶ 포털 SI알고리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20-09 (발간일: 2020.9.17)

- ▶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 ▶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8 (발간일: 2020.8.13)

- ▶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이슈브리프 2020-07 (발간일: 2020.7.23)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 ▶ 악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보기"
-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반'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펍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8)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유튜브 '수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 ▶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 ▶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 ▶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5가지 이유
- ▶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슈브리프 2019-02 (발간일: 2019.1.24)

- ▶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이슈브리프 2019-01 (발간일: 2019.1.10)

- ▶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 전환 ▶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 ▶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